

EU Brief

| EU 동향 |

- 한-EU 전략적 동반자 시대를 맞이하여
Welcoming the era of Korea-EU strategic partnership
- EU 경기 양극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Policy suggestions for solving EU's problems of internal economic imbalance
- G20 정상회의를 통해 본 EU와 한국의 공조 가능성
EU and its member states' policy positions at the G20 Summit in Korea
- WTO 분쟁해결 사례 분석으로 살펴본 EU의 통상 이해
EU's efforts to tackle unfair trade: An analysis of EU's dispute settlement cases at the WTO
-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EU 곡물산업의 미래
EU grains industry and changes in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Focus

한-EU 전략적 동반자 시대를 맞이하여 002
Welcoming the era of Korea-EU strategic partnership



EU Economy

EU 경기 양극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004
Policy suggestions for solving EU's problems of internal economic imbalance



EU Politics

G20 정상회의를 통해 본 EU와 한국의 공조 가능성 008
EU and its member states' policy positions at the G20 Summit in Korea



Trade & Investment

WTO 분쟁해결 사례 분석으로 살펴본 EU의 통상 이해 012
EU's efforts to tackle unfair trade: An analysis of EU's dispute settlement cases at the WTO



Industry Trends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EU 곡물산업의 미래 017
EU grains industry and changes in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EU Law

리스본조약의 입법절차 변화로 유럽의회의 입법 권한 강화 025
Amendments of EU legislation procedures in the Lisbon Treaty



Social Issues

EU의 공동이민제한정책은 계속될 것인가? 029
EU's Common Immigration Policy



Report Review

유로화 회생을 위한 5가지 처방 033
5 solutions to fix the eurozone



EU Centre news

제16회 EU 특별강연 035
The 16th EU Special Lecture

『EU Brief』 만족도 조사 결과 036
Satisfaction survey on EU Brief

EU Brief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Yonsei-SERI EU Centre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The EU Brief is a newsletter published by the Yonsei-SERI EU Centre and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본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위원: 이종규 | 감수 위원: 김득갑 | 편집 담당: 정민경 | EU Brief에 게재된 내용에 관한 문의나 개선사항은 편집 담당(02-3780-83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EU 전략적 동반자 시대를 맞이하여

Welcoming the era of Korea-EU strategic partnership

한국과 EU는 지난 10월 6일에 브뤼셀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지난 2007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최종 성사된 것이다. 한-EU FTA는 EU 개별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없더라도 우리 국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치게 되면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5월 한-EU 기본협력협정(개정)을 체결한 양측은 이로써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인구 5억 명의 거대 소비시장인 EU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EU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시장이자 우리의 최대 투자국이다. 하지만 EU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우리는 여전히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개별 국가로 유럽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회원국들은 유학이나 여행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친숙한 편이다. 반면 통합된 실체로서의 EU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탓에 EU는 우리에게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국내에서도 EU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국내에서는 ‘1993년 유럽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 출범’에 대비해 민관 합동으로 EU 법규에 대한 연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었다.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통합된 EU가 ‘유럽요새(fortress europe)화’가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였다. 이에 따라 거대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정부와 재계, 학계가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99년 유로화(EMU) 출범’에 대응하고자 부심했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이다.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유로화 출범을 앞두고 경영시스템 정비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가 유라시아대륙 건너편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과성 성격이 짙었다면, 한-EU FTA가 체결되어 발효를 앞둔 이번의 시기는 우리의 인식에 근본 변화를 요구한다. 한-EU FTA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부와 기업이 주된 이해당사자여서 EU에 대한 관심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관심의 폭도 훨씬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한-EU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FTA가 발효되면 무역, 투자 등 경제관계는 획기적인 진전이 예상된다. 또한 한-EU 기본협력협정이 발효되면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 교육, 사법, 내무 등 전방위에 걸쳐 교류가 더욱 밀접해지고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EU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EU는 리스본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법적 실체가 되었다. 과거에는 경제, 사회, 환경정책 분야에 대해서만 ‘EC’의 이름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했지만, EC를 법적으로 승계한 EU는 공동외교안보정책과 사법·내무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EU의 정책 결정권한도 대폭 강화되었다. 앞으로 EU는 무역, 환경, 에너지, 기술표준, 경쟁법, 지적재산권 등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더욱 발 빠른 정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략적 동반자 시대를 맞아 EU와의 관계 강화를 적극 활용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들은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EU와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began in July 2007 and almost three and half years later, the pact was signed in Brussels on October 6 2010. The date of provisional application will be July 1 2011, provided that it is ratified by the Korean and the European Parliament. This comes after the signing of the updated Korea-EU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FwA) in May 2010.

The EU, which is the world's largest economy and a huge market of around 500 million people, is an important economic partner for Korea. It is the second biggest importer of Korean goods after China and it is the biggest investor in Korea. Despite its economic importance,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n the EU in Korea is limited.

There were times when Koreans started to pay special interests on the EU. Between the end of 1980s and the beginning of 1990s, a research programme wa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n cooperation. The aim was to be prepar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Single Market” in 1993. At that time, many worried that an economically integrated EU would lead to a creation of fortress Europe. The second time when Koreans' interests on the EU rose was between the end of 1990s and the beginning of 2000s. It seemed vital to adapt to the world with the “European Monetary Union” which was established in 1999.

In the past, the causes behind Korean's rising interests on the EU were to adjust for changes across the Eurasian continent. But now, there must be a fundamental change in our understanding on the EU as we wait for the Korea-EU FTA to take effect. Its impact

on our everyday lives will be significant. Korean consumers, not only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will become important stakeholders and the breadth and depth of interests will expand as a result.

The Korea-EU relations will improve significantly and they will become important strategic partners in the future through the FTA and the FwA. We can expect a valuable progress in trade and investment once the FTA enters into force. Also, our relationship in various fields such as in culture and education will improve significantly when the FwA takes effect.

We must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n the EU in order to be ready for this change. The EU has truly become a legal entity and the role of EU institutions has been strengthened with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The EU's decisions in various areas such as in trade, environment, energy, and technological standard will affect Korea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Korean government must establish a national strategy with an aim of improving future Korea-EU relations and Korean businesses should devise a plan to maximise their benefits from the FTA. Two partners will be able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through effective industrial cooperation. ★



EU 경기 양극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Policy suggestions for solving EU's problems of internal economic imbalance

The economic imbalance between EU member state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not just for the EU, but also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economy. Germany enjoyed an unexpectedly strong economic growth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mainly thanks to a weak Euro, whil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were suffering from a sovereign debt crisis. France's dependence on external finance and trade is relatively low and the purchasing power of households has held up reasonably well during the crisis. As a result, France could maintain a stable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another threat could arise in the EU as vulnerable member states issue more government bonds in order to repay their debt. Also, the problems in Western Europe's financial markets and their sovereign debt situation could spread to Eastern Europe. If the eurozone's internal structural imbalance, which was one of the main causes behind the financial crisis, deepens even further, it may once again fall in danger. The EU needs a strong political leadership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erences in member states' interests and to fix its structural problem.

경기 양극화로 인해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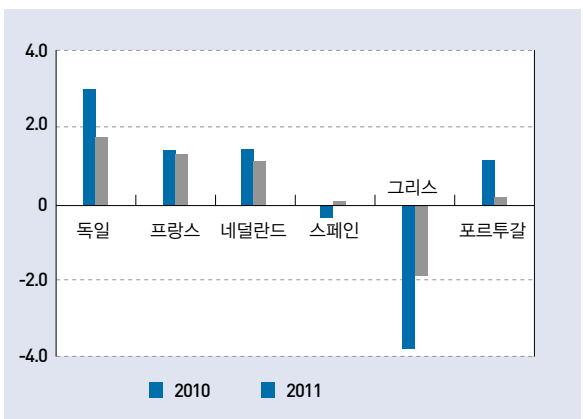
최근 유로지역의 경기 양극화가 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 남유럽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로지역 내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로화 단일통화 기반이 재차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통계청(Eurostat)이 발표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주요국(서유럽)과 주변국(남유럽)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주요국인 독일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은 3.7%(전년동기 대비)에 이르렀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각각 1.7%와 2.1%를 기록했다. 이미 강한 경쟁력을 지닌 독일경제에 남유럽 재정위기 상황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비교적 금융위기의 타격을 덜 받은 프랑스는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등 현재의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남유럽 국가들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3.5%, 스페인 -0.2%, 아일랜드 -1.2%를 기록했다. 더구나 스페인의 저축은행 부실 등 금융위기의 불안이 상존하고 있고, 신용등급 강등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긴축재정 이행에 대한 의구심마저 확대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과 주변국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현재 유로지역의 근간인 유로화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 귀추가 주목된다.

★ 유로지역의 성장률 격차 전망



자료: Eurostat, 삼성경제연구소

주요국은 경기부양책과 수출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

현재 독일경제는 유로지역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상반기에 독일은 오히려 유로화 약세를 바탕으로 예상을 웃도는 성

장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2010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인 1.4%를 훨씬 뛰어넘는 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독일 업체들을 중심으로 유로화 약세의 덕을 톡톡히 봤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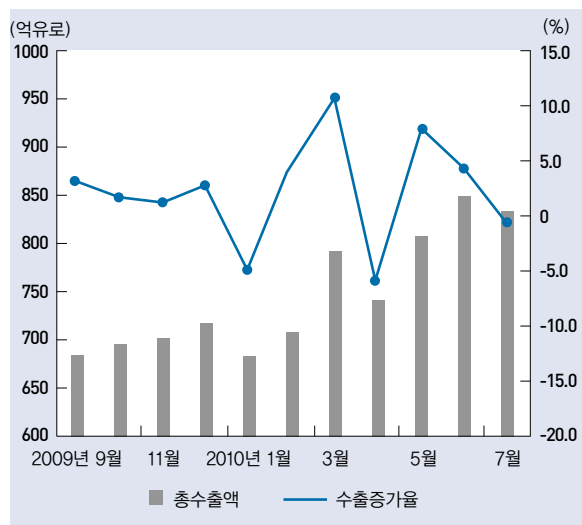
지멘스는 고속열차와 풍력발전기 등의 첨단산업과 공장 설비 같은 기계산업 제품에 대해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덕분에 북미에서의 매출이 27% 늘었고 아시아에서도 18%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2010년 영업이익 전망을 65억 유로에서 75억 유로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BMW, 중형트럭업체 만(MAN), 기업형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SAP, 아디다스 같은 독일 업체들도 모두 유로화 가치 하락의 혜택을 본 대표적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유로화 하락의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유로 경제가 불안해지자 신뢰도가 높은 독일로 자본이 몰리면서 채권 금리가 매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따라 독일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부가적인 혜택을 보게 되었다. 실제로 독일의 세계적 렌터카업체인 직스트는 2009년 말 회사채(3억 유로)를 발행해 얻은 자금으로 이자가 높은 다른 회사 채권을 사들여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약진에는 독일의 전통적인 수출 품목 중 1,2,3위를 차지하는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려 총수출의 46.6%를 차지한다.² 최근 기계 산업에서는 수주액이 전년 대비 61% 급증했으며, 독일 최대의 특수화학제품 생산업체인 랑세스는 올 설비투자 규모를 2009년 보다 50% 늘리는 등 오히려 경기 과열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는 독일이 1990년대 이후에도

¹ 독일의 對EU 교역은 65%에 육박했으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소한 반면, 非EU지역에 대한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2009년 5월 이후 독일의 총 수출은 28.8% 늘어났는데, 이 중 非EU지역에 대한 수출이 39.5%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 동남아 등 對아시아 수출이 현저한 증가세를 보였다.
² 자동차 및 부품 17.7%(1위), 기계 및 장비 14.9%(2위), 화학제품 14.0%(3위).

지속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으며,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이 고착화된 영미권 국가들과 달리 제조업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독일의 월별 수출 추이



자료: Eurostat.

프랑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여타 유로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세³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프랑스 경제가 금융의존도와 무역의존도가 낮고 가계의 구매력이 유지되어 외부충격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 상반기에도 프랑스 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회복세를 이어나갔다. 1/4분기에는 유로화 약세가 수출⁴을 증가시켜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1.2%를 기록하였고, 2/4분기에는 수출 증가가 둔화되는 대신 재고증가⁵에 힘입어 경제

³ 2009년 경제성장률: 프랑스(-2.5%), 영국(-4.9%), 독일(-5.0%).

⁴ 수출의 성장기여도(1/4분기): 0.5%.

가 1.7% 성장했다. 특히 산업 활동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 생산 증가로 인한 소재 부문(금속가공, 철강, 플라스틱), 전자부품, 펄프제지 등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프랑스 경제는 2010년 성장률 목표치였던 1.4%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외부충격에 덜 민감했던 프랑스 경제

(%)

2008년 기준	프랑스	독일	영국
금융자산 비중 (가계자산 대비)	35	44	47
무역의존도 (GDP 대비)	39	54	60
민간부채 비중 (GDP 대비)	108	102	211
세출규모 비중 (GDP 대비)	53	48	44

자료: Eurostat; Bloomberg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프랑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대부분 경기부양에 의한 효과였으며, 이제부터는 민간의 성장동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 계획인 'Grand Loan'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프랑스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350억 유로(GDP의 1.8%)를 집중 투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등교육과 직업훈련(110억), 연구조사(80억), 중소기업(65억), 핵에너지 및 녹색기술 개발(50억), 인터넷 및 디지털화(45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국채발행(220억)과 금융위기 당시에 은행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130억)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주변국의 경기침체 심화는 재정위기 재연 우려 증대

재정위기의 당사자였던 그리스의 경제는 서유럽의 주요국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⁶을 이행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고정자본 투자 감소와 상당 폭의 정부지출 감소가 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5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상승한 12.0%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3.5%p 상승한 수치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스페인인 상반기에 일시적인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은, 하반기에는 경기후퇴가 재연되는 양상이다. 최근 소비심리 위축, 기업의 대금납부 지연 등 거시경제 불안이 실물경기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완벽히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불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2/4분기 실업률이 20%를 넘어섰는데 이는 유로지역 출범 이래 최고치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당분간 이러한 고용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상황도 좋지 않다. 최근 *Washington Post*는 포르투갈⁷에서 재정긴축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국채를 앞다투어 내다팔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아일랜드가 2/4분기에 예상 밖의 마이너스 성장(-1.2%)을 기록한 것이 우려를 가중시켰다. 당초 아일랜드는 이 기간에 0.5%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로써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리라는 기대를 충족하기는커녕 더욱 침체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아일랜드는 그리스 등 다른 남유럽 국가와는 달리 초강력 긴축정책으로 재정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는데도 이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따라

⁶ GDP 대비 14%에 육박하던 2009년 재정적자를 2010년 8.1%까지 낮추기로 한 긴축 프로그램을 시행.

⁷ 그나마 포르투갈은 2/4분기 1.4%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다른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다.

⁵ 재고증감의 성장기여도(2/4분기): 0.6%.

서 한편에서는 위기의 원인이 방만한 재정지출이 아니라 도리어 지나친 긴축으로 경제성장의 기회를 놓친 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품 붕괴로 타격을 받은 거대은행 앵글로아일랜드뱅크에 대한 구제비용이 치솟으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아일랜드는 위기 이후 앵글로아일랜드뱅크를 비롯해 5대 은행 중 4개를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부실을 메우느라 GDP의 20%가량인 330억 유로의 빚을 졌다. 하지만 금융권은 여전히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역내 금융불안의 잠재적 요인

지역	형태	잠재적 불안요인
EU 전체	금융시장 경색	• 성장률 예상치 하회 •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 실패 • 금융기관 부실 확대
남유럽	시장 내 디폴트설 대두	• 국채발행 실패 • 원리금 상환 차질 • 스페인 저축은행 부실
동유럽	시장 내 디폴트설 대두	• 서유럽 은행부실 확대 여파 • 재정통계에 대한 불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이와 같이 재정 취약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EU 회원국은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되면 언제든지 금융불안이 재연될 여지가 있다. 또한 남유럽의 경우 국채발행 및 상환 시기와 맞물려 불안이 재발할 소지가 크며, 동유럽은 서유럽의 은행문제 및 재정통계에 대한 불신 문제가 부각되면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 특히 IMF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경기악화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의 상황이 좋지 않다.

구조적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경제회복은 유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이를 기반으로 구제금융패키지에 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자국에서의 여론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주변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해서 늦어진다면 재정위기 확산 방지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유로체제가 근본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아래 표) 구조적 불균형의 심화는 이와 같은 노력에 장애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특히 3번째 전제조건인 제도적 보완은 위기관리체계 마련, 재정규율의 엄격한 시행 및 재정통합 추진, 회원국의 채무재조정 문제, 통합감독기구 설립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양극화의 심화는 회원국 간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유로체제의 안정을 위한 전제조건

전제조건	현황 및 전망	충족 가능성
조건 1 구제금융패키지의 구체적인 집행방안	ECB의 국채매입, 독일 의회의 그리스 지원안 통과 등으로 이미 신뢰 확보	긍정적
조건 2 회원국의 긴축정책 집행능력	국내 경기회복 + 긴축 프로그램 (동시에 달성)	유보적
조건 3 체제의 취약점을 제도적으로 보완	정치적 이해관계 및 회원국의 국가 주권 문제 등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움	부정적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그러므로 EU는 양극화 심화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원국 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통합된 정치적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리스본 체제의 성공적 작동여부는 물론 향후 국제사회에서 통합된 EU의 정치·경제적 위상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G20 정상회의¹를 통해 본 EU와 한국의 공조 가능성

EU and its member states' policy positions at the G20 Summit in Korea

This brief analyses EU's policy positions in the Group of 20. The EU has been strongly promoting institutionalization of its governance and its decision making process is sophisticated as a result. The G20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revitalizing the world economy, and the Korean economy, which is relatively small and depends heavily on exports, is benefiting from its successful outcomes. The EU is set to become a major partner for Korea as it advocates the continuation of the G20 process and furthe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group. It has already shown signs of strong support when Korea announced that development issues will be included in the G20 agenda under the "Korea (or Seoul) Initiative." The next G20 summit will be held in Seoul, on November 11th~12th, and the agenda will focus on reforming the global economic governance. In order to derive desired results from the Summit, the host has an important role of leading the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G20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경제블록인 EU

G20 회원국 중 EU의 위상은 독특하다. EU는 회원국 중 유일한 경제블록으로, 국민국가(회원국)가 보유한 통화와 금융·경제 정책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EU라는 초국가기구로 이양되었고 G20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1999년 1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부터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과 유럽이사회(EC: European Council) 순회의장국(rotating presidency)이 EU 대표로 참석했으며, 유로지역의 중앙은행 격인 ECB 총재는 통화정책의 책임자로 G20에 참석하였다. 또한 유럽 각국의 수반 역시 참석하였는데, 상당부분의 재정정책이 여전히 각 회원국의 고유권한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대표(dual representation)는 2008년 11월 제1차 G20 정상회의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다만 정상회의에는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장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Permanent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일명 'EU 대통령')이 참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2009년 12월 1일부터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이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2010년 6월 26~27일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 EU 대표로 참여했다. 또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도 EU 집행위원장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이 EU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전의 1~3차 G20 정상회의에

는 EU 집행위원장과 순회의장국 수반이 EU의 대표 역할을 하였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그리고 非서방선진 7개국(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이 EU라는 초국가기구와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의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한다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된 G20 정상회의에 대한 EU의 입장을 분석해 한국의 금융외교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G20 격상에 대한 EU의 입장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는 여러 가지 합의를 이루어냈다.² 또한 피츠버그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수반들은 중국이나 인도 등의 신흥경제국을 제외하고 세계경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무의미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두되던 '신세계질서(emerging

¹ 이 글은 안병익 (2010). "G20과 EU: 한국의 금융 외교에 대한 함의" 김기석(편),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G20 정상회의』(pp. 233~253). 서울: 부글북스. 중 필자의 글을 압축 요약하고 보완한 것이다.

² 3차 및 1~2차 정상회의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최희남 (2010). "G20 정상회의 의제와 한국의 전략" 김기석(편),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G20 정상회의』(pp. 361~388). 서울: 부글북스, 참조.

new world order)' 형성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구로 G20과 G7/G8, G14 등이 경쟁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G20이 G7/G8, G14 등을 제치고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한 최상위 포럼으로 지정되었다. 이런 격상에 대해 주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를 보면 EU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과 EU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미국과 영국은 G20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독일은 초기에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곧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반대, EU는 이를 지지했다.

미국이 G20을 지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 등 일부 신흥국가로부터 글로벌 경제위기 촉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국제경제질서에서 영향력이 커진 신흥국들을 포용하고 이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G20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³ 백악관은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중에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세계경제의 극적인 변화가 항상 글로벌 경제협력 틀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며 "G20 회원국 수반들이 경제위기를 초래한 금융체계의 약점을 피해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면서 G20을 이런 노력의 중심에 둔다는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⁴

미국이 G20을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하는 데 있어 영국도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당시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G20이 글로벌 경제 조정에서 주도

적인 정치세력(a dominant political force)이 될 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⁵ 그는 G20이국제금융구조(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에서 핵심조정기구의 역할(central coordinating role)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0년 5월 총선에서 이겨 총리로 취임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보수당 당수도 G20을 국제협력에 유용한 기구라고 인식하고 있다.⁶

EU는 대외적으로 다자주의를 강조해와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있어 G20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는 입장이다.⁷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앞둔 2009년 9월 17일에 브뤼셀에서는 G20에서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특별 유럽이사회(Extraordinary European Council)가 열렸다. 이 자리는 EU 회원국 중 G20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별 유럽이사회에서 보너스와 금융규제 등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 개략적인 큰 틀이 합의되었지만 막상 G20 정상회의에서는 EU 집행위원장과 유럽이사회 순회의장의 목소리가 거의 표출되지 않았다. 정상회의의 특성상 국가수반들, 특히 대립적인 입장을 지닌 국가수반들이-피츠버그 정상회의의 경우 금융기관 보너스에 대해 프랑스와 미국이 대립각을 형성하였다-언론의 집중을 받았기 때문이다.⁸ 1970년대부터 G7 정상회의에 참여한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언론의

⁵ Brown says G20 will focus on new framework, (2009. 9. 25.). *Financial Times*; New body takes on economic leadership. (2009. 9. 26.). *Financial Times*.

⁶ The UK: What Contribution will David Cameron Make? (2010. 6. 25.). *Financial Times*.

⁷ G20에 관한 EU의 입장은 EROPA (2009). Informal Meetings of EU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Brussels 17 September 2009. <http://www.se2009.eu/polopoly_fs/1.15282!menu/standard/file/agreed%20lang%20-%20FINAL-1.pdf> (2009. 9. 20.)을 참조. 스웨덴은 2009년 하반기 유럽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 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⁸ 이외에 주요국의 의제 관련 입장 차이를 살펴보면 2008년 1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 때 금융규제 감독에 대해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이를 우선순위로 제시한 반면, 미국은 경기부양책을 우선한 점을 들 수 있다.





조명을 받지 못한 상황과 유사하였다.⁹

반면, EU 주요 회원국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G20의 격상에 대해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G20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 지지했고 독일은 초기의 회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점차 G20을 지지했다. 반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G14를 선호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G14를 글로벌 경제 조정 기구로 지지하는 이유는 G20으로 확대될 경우, G8에서 자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은 기존의 G8에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이집트를 추가한 G14를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¹⁰

독일은 IMF 등의 국제금융기구에 유럽 출신의 대표가 많아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G20을 설립했다는 시각 때문에 초기에는 G20을 경계했다.¹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20이 글로벌 경제문제를 다루기에 너무 큰 틀이라 간주하고 중국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해 G8을 선호했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이탈리아의 라퀼라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연방하원 연설을 통해 G20이 G8을 대체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¹² G20에 대한 초기 부정적인 입장에서 돌아섰다.

EU와 주요 회원국의 입장 차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경제국들은 자신들의 위상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국가수반들의 협의체인 G20을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기구라 여기고 이를 선호했다.¹³ 반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G8 회원국이던 일본은 G20의 격상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G20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G8과 G20이 대체관계가 아니며, 양 기구 간의 적합한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기구로 G20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¹⁴ 초국가기구인 EU 집행위도 G20 제도화에 대해 한국과 유사한 시각을 지니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2010년 6월 토론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이 EU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요한 수단이다”라고 언급했다.¹⁵

세계 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에 대한 미국과 EU 등 주요 회원국의 정책선호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에 대한 주요 회원국 입장 비교

구분	입 장(G8 혹은 G14과 비교)
미 국	중국 등 신흥국이 포함된 G20을 다른 조직보다 선호 영국과 함께 G20이 국제 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이라는 문구를 제안하고 확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
중국 등 신흥국	발언권을 낼 수 있는 G20 적극 선호
EU	EU 차원에서는 다자주의 지지 입장에서 G20 선호 - 영국과 독일은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G20을 선호하고, 특히 영국은 미국과 함께 G20을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하는 데 핵심적 역할 담당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G14 선호
일본	G8이 여전히 중요하며 G20의 역할 확대에 우려를 표명
한국	G20 정상회의의 제도화 필요성 제기 G8과 G20 간의 분업과 협조적 관계 구축 필요성 강조

9 EU(당시 EEC)의 G7 참여과정에 대한 분석은 Garavini, G. (2006). The Battle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History*, 12(1), 141-158 참조.

10 Aryeetey, E. et al. (2009). G-20 Summit: Recovering from the Crisis. Brookings Institution. ; Pohlmann, C., Reichert, S. & Schillinger, H. (2010). The G-20: A Global Economic Government in the Making? Friedrich Ebert Stiftung.

11 김치욱 (2009). "G20의 부상과 중견국가 한국의 금융외교," 『국가전략』, 15(4), 81-116.

12 정준호 (2009). "G20 모니터링 보고서, 독일," KNU.

13 Upbeat G20 takes new lead role on global economy. (2009. 9. 26.). *Reuters*.

14 S. Korea: G20 won't replace G8, should collaborate. (2009. 6. 26.). *Reuters*.; Lee Myung bak (2009). Pittsburgh: Bridging the Washington-London G20 Summits and Beyond. University of Toronto, G20 Information Centre. <http://www.g8.utoronto.ca/newsdesk/pittsburgh/lee.html> (2009. 9. 22.)

15 EU's Barroso calls on G20 to agree bank levy. (2010. 5. 14.). *AFP*.

제도화와 개발 의제에서 협력 가능

EU는 가장 앞선 지역통합을 선보이고 있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를 강조해왔다. 비록 2010년 초부터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국가채무 위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로존의 붕괴까지 예상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EU는 지역주의의 선봉으로 세계 각국에 유용한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다.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의 연례화에는 합의했지만 아직도 제도화 측면에서 G20은 비공식성, 임시성, 공약의 비구속성과 책임성 결여, 약속국의 배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¹⁶ 상설 사무국도 없고 정상회의의 정례화 시기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참가 수반들이 합의해 결정한다. 또한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반면, EU 기구의 의사결정체계는 매우 정교하며 제도화되어 있다. 또 EU는 G20 상설 사무국 설치와 민간단체의 참여 등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1년 거버넌스 백서에서 EU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간단체(NGOs)와 이익단체 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정상회의 전에 (11.10~11.11) 세계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을 개최하고 이를 G20 정상회의의 한 과정으로 정착시키려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¹⁸ 2011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미 G20 사무국 설치와 국제통화체제 개혁을 의장국의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¹⁹

따라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을 지닌 중견국가로서 G20 체제의 유지와 존속이 중요한 한국에게 EU

는 귀중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 한국이 '코리아(혹은 서울) 이니셔티브'로 추진 중인 개발 의제의 경우 EU의 지지를 얻고 있다.²⁰ EU 집행위의 한 관리 는 민간분야의 역량개발(capacity-building)에 초점을 둔 한국 정부의 개발 의제에 대해 EU의 개발 컨센서스와 매우 흡사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²¹ 물론 EU의 경우 집행위원장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이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이들은 정책권한에 해당하는 분야에서만 발언을 한다는 한계도 있다.²²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금융규제 등 중요한 의제에서 EU는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에 비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이후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로서 G20을 공고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화'는 중요한 이슈이고 EU는 한국과 이 점에서 공조가 가능하다. 또 개발 의제의 경우도 EU의 지지를 얻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논란이 많은 의제를 잘 조정하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EU와 EU 주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를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안병익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강사

20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한 연설에서 의장국인 한국이 추진 중인 의제로 개발과 금융안전망(FSNs: Financial Safety Nets)을 제시했다.

21 EU는 2005년 12월 개발에 관한 컨센서스(EU Consensus on Development)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G20 모니터링 사업단의 200년 4월 월례 보고서를 참조.

22 EU의 경우 '하나의 깃발(EU기),' 두 개의 좌석,' 한 목소리' (one flag, two seats, one voice) 체계를 구축했다. 발언권은 집행위원장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이 각각의 정책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한 명만 발언하는 한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 사례 분석으로 살펴본 EU의 통상 이해

EU's efforts to tackle unfair trade: An analysis of EU's dispute settlement cases at the WTO

The World Trade Organisation'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will continue to be legitimate even with the Korea-EU FTA in place. In order to find out how the EU has been using WTO's DSM, this brief examines 152 dispute settlement cases involving the EU. The analysis is carried out by categorising them chronologically and according to their complainant, respondent, subject and agreement. The EU has been consistently making use of the DSM and has been one of the most active WTO members. The EU uses the mechanism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ts industries and especially so for sectors involving agricultural products, vehicles, textiles and culture-related services. These were also sensitive areas during the Korea-EU FTA negotiations.

한-EU FTA 발효 후에도 유효한 WTO 분쟁해결제도

한-EU FTA가 가세된 지 1년여 만인 지난 10월 6일 드디어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최종 결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이탈리아의 이의 제기로 진통을 겪은 끝에 2011년 7월 잠정발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정식 서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한-EU FTA는 양측의 입법기관 동의 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FTA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EU 양측은 FTA 이행 시 발생하는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비관세장벽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제도도 있으나, 대부분 WTO 분쟁해결제도나 한국이 기체결한 다른 FTA의 분쟁해결제도와 규정이 유사하다. 한-EU FTA 분쟁해결제도는 경쟁, 지속가능발전, 무역구제, SPS 등을 제외한 전 협정문에 적용된다.¹ 한편, 포럼 선택 조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복수의 분쟁해결 포럼 간 관할 중복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² 즉, 특정조치(particular measure)가 FTA 규정뿐만 아니라 WTO 규정을 동시에 위반했을 경우, 두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후 동절차가 완료되면 다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FTA와 WTO 협정의 동일한 의무(identical obligation)를 위반했을 때는 FTA나 WTO 중 하나의 분쟁해결절차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³

따라서 한국과 EU 간에 FTA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통상마찰이 FTA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거나, FTA 또는 WTO 분쟁해결절차 하나만 활용할 수 있다.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여전히 무역분쟁 해결에 유효함을 의미한다.

WTO 출범 이후 EU가 당사자였던 분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EU가 WTO 분쟁해결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10월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협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 번호(예: DS1)가 부여된 414건의 사건⁴ 중 EU가 분쟁 당사자였던 152건의 사건을 시기별, 제소/피소별, 상대국별, 분쟁대상별, 위반이 제기된 협정별로 분석하였다. 일부 사건은 양자협의 후 종료되기도 하고, 일부 사건은 WTO 분쟁해결기관(DSB)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수년간 지루하게 이어지기도 했다. 이 모든 사건을 문제 조치와 WTO의 평결까지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므로, 각 케이스별 사실관계나 법률적

³ 한-EU FTA 14.19조, "Relation with WTO Obligations."

⁴ WTO 분쟁해결절차가 이용된 회원국별 사례는 WTO의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동 분류에서 EU에 해당되는 사건을 분석한다.

¹ 한-EU FTA 11.8조, 13.16조, 3.15조, 5.11조, 14.2조.
² 관계부처합동 (2009. 10.),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p.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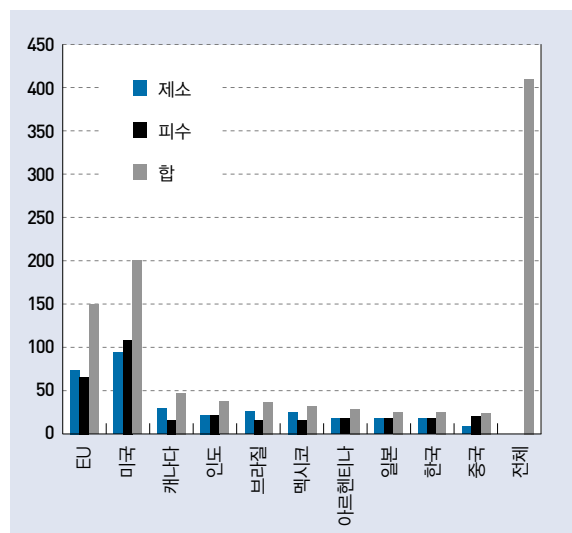
판단보다는 분쟁해결절차 자체에 대한 EU의 접근을 다루었다.

EU의 WTO 분쟁 건수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준

1995년 WTO 출범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국제법적으로나 실제 다자통상체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는 분쟁해결제도를 뽑을 수 있다. WTO 출범 전 GATT1947 체제의 분쟁해결절차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절차 단계별 소요시간 제한, 법률심(상소기관),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역총의제) 등이 도입되었다. 15년간 운용 과정에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WTO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분쟁해결제도가 기여한 바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어느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시된다. 2010년 10월 현재 WTO에 협의가 개시된 분쟁 건수는 총 414건이다. 분쟁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당사국이 된 회원국은 총 206건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고, EU는 152건으로 두 번째이다. EU가 당사국인 분쟁 건수는 제소 82건, 피소 70건이며, 전체 414건의 36.7%를 차지하고 있

★ WTO 회원국별 분쟁해결 사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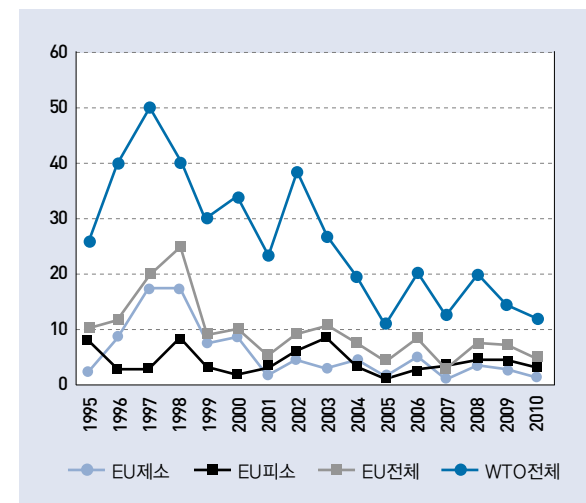


자료: WTO

다. 또한 98건의 분쟁에 제3당사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연도별 분쟁해결 사례 건수를 보면, 1995년 이후부터 1998년까지 EU가 매우 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과 1998년 각각 제소 건수가 16건에 달했고, 특히 1998년에는 당해연도 전체 WTO 협의개시 건수의 61.0%를 EU가 제기하거나, EU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에 EU가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WTO 전체 분쟁해결절차 개시 건수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03~2005년 EU 관련 분쟁이 전체의 40%를 상회하였고, 2009년에도 42.9%의 분쟁이 EU 관련 분쟁, 즉 EU가 제소하거나 피소된 분쟁이었다.

★ WTO 전체 분쟁 건수 및 EU 관련 분쟁 건수 추이



자료: WTO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제소, 개도국을 대상으로는 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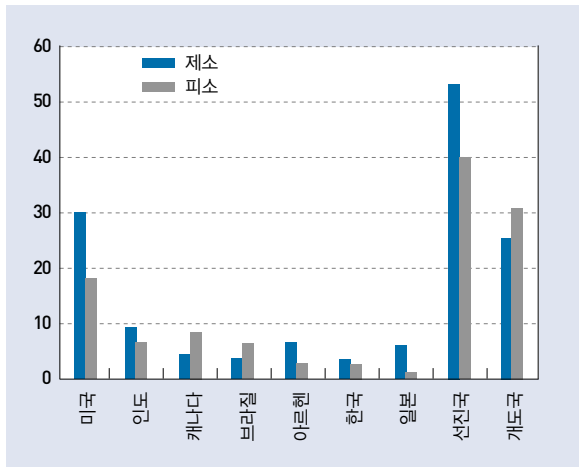
EU의 WTO 분쟁 상대국은 총 25개국이다. 이 중 미국이 50건(제소 31건, 피소 19건)으로 전체 152건의 32.9%를 차지했고, 인도(17건), 캐나다(14건), 브라





질(11건), 아르헨티나(10건), 한국과 일본(각 7건) 순으로 많은 분쟁을 치렀다.

★ 상대국별 제소/피소 건수



자료: WTO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선진국⁵을 대상으로는 제소 비중이 높고, 개도국을 대상으로는 피소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호르몬 비프 사건과 같은 대표적인 사건과 여러 무역구제조치를 놓고 2000년 전후로 EU가 미국과 극심한 통상마찰을 겪었다.

개도국의 경우 제소보다 피소가 많았는데,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지루한 소송이 진행된 바 있는 바나나 케이스 등에 과테말라, 온두라스, 에콰도르가 참가했기 때문이다. 비단 바나나 사건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으로 EU와 가까운 소위 ACP⁶ 국가들과 EU 확대 과정에서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는 시기적 흐름 속에서 특혜를 받지 못하는 다른 개도국들이 이러한 특혜 조치를 문제 삼아 제소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EU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WTO 분쟁해결절차 적극 활용⁷

EU가 주로 제소한 품목 또는 산업 분야는 농수산업, 금속 및 철강, 섬유 및 신발, 문화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자동차, IT 및 전자 순으로 많다. 특히 EU의 경쟁력이 높은 업종인 버터/치즈 등 낙농제품, 증류주/와인/맥주 등 주류 를 포함한 낙농제품과 가공농산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철강, 섬유/신발, 음반/영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자국 산업의 피해구제에 적극적으 나 섰다. 한편, 기타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제소도 상당히 많았는데, 수입품을 차별하는 통관조치, 무역구제조치 관련 차별적 접근법⁸, 국내 조세조치 및 행정조치 등에 대해 WTO 차원에서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농수산업은 상대국을 제소한 경우도 많았으나, EU가 제소당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농산물에 대한 차별적 관세평가와 호르몬 사건과 같은 엄격한 위생조치 등으로 인해 EU는 다른 WTO 회원국의 제소대상이 되었고,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회원국 간 차별적 바나나 수입/유통조치도 큰 문제가 되었다. 항공기/선박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나 상계관세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되었고, IT/전자의 경우 지난 8월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는 IT 제품에 대한 차별적 관세조치가 제소된 바 있다.

분쟁대상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소하고 있고, 동시에 피소 건수도 많았다. 철강의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02년에 적극

⁵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한 기준은 OECD 회원국인지 여부에 따랐으며, 비 OECD 회원국 중 대만을 추가적으로 선진국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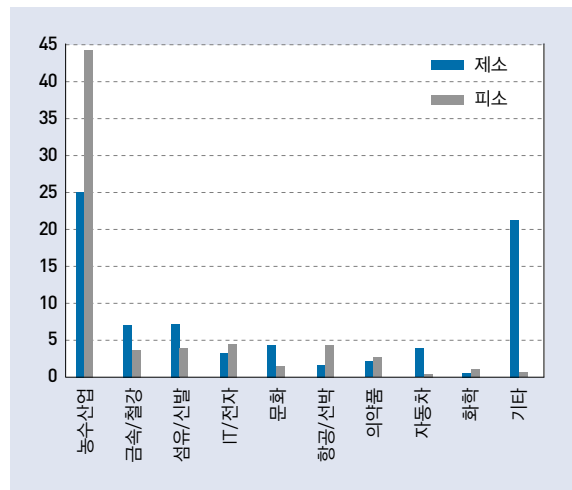
⁶ EU는 과거 유럽의 식민지 국가였던 아프리카, 카리브연안, 태평양 국가들(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과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로메협약에 이어 코토누협정 체제를 2007년까지 유지해왔다.

⁷ 하나의 분쟁 사건에서 분쟁대상 품목과 산업이 복수인 경우가 있으나, 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 또는 산업을 하나로 한정함.

⁸ 예컨대 미국의 덤핑마진을 높이는 제로잉 기법, 장수한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피해 기업에 지급한 버드수정법 등.

적으로 제소에 나서, 2000년을 전후한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무역구제조치의 확대 흐름 속에 EU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을 알 수 있다.

★ 분쟁대상 품목/산업별 제소/피소 건수



자료: WTO

협정별 분석에서도 EU의 통상정책 특성 반영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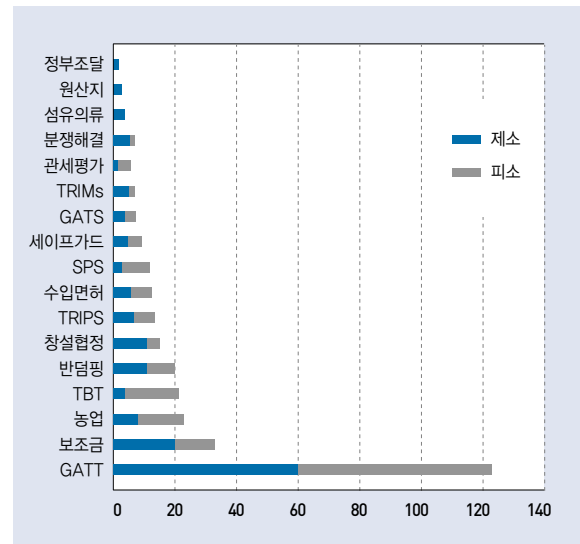
EU가 당사자인 분쟁사건에서 가장 많이 원용된 협정은 GATT1994였다. 분쟁사건에서 원용된 전체 협정수의 38.7%가 GATT와 관련된 것이다.¹⁰ GATT의 무 위반은 제소와 피소 모두에서 비슷한 비율로 제기되었다. 그 뒤를 이어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이하 보조금협정), 농업협정, 기술관련무역장벽(TBT협정), 반덤핑협정의 순으로 원용되었다.

제소한 사건에서 원용한 협정문은 보조금협정, 반

⁹ 협정별 분석에서는 분쟁사건의 대부분에서 원용된 협정과 조문이 복수이므로, 협정 내 복수의 조문은 협정 하나로 계산하되, 복수의 협정은 모두 집계함. 예컨대, 일 사건에서 GATT I조, III조, TBT협정, 원산지협정이 원용되었을 경우, 사건은 하나이나 대상 협정은 세 개로 집계함.

¹⁰ GATT 조문의 상당수가 WTO 협정과 관련된 조문이나, 집계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음. 예: GATT VI조와 반덤핑협정이 동시에 원용되었을 경우 각각 집계함.

★ 의무위반인 협정별 제소/피소 건수



자료: WTO

덤핑협정, WTO 창설협정, 무역관련지재권협정(TRIPS),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등이다.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뿐만 아니라 상계관세조치, 반덤핑조치, 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무역구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자국의 음반이나 영화와 같은 문화상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소된 분쟁사건에서는 농업협정, TBT협정, 보조금협정, 반덤핑협정, SPS협정, TRIPS협정, 수입면허 협정, 관세평가협정 등이 많이 원용되었다. EU 역시 농업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민감한 분야인 점(농업, 보조금), 기술 및 위생기준이 수입을 제한할 정도로 높은 점(TBT, SPS), 문화분야의 민감성 등으로 미뤄볼 때, EU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특성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한 대응 필요

EU가 당사국인 WTO 분쟁해결 사건에서 연도별, 상대국별, 산업별, 협정별 통계분석을 통해 EU가 역내 산업의 무역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체





도를 빈번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분쟁사건의 유형과 분야가 향후에도 반복 될 가능성이 반드시 높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역내 산업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EU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러한 통계적 분석이 유용하다.

한·EU FTA 협상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EU의 관심 산업 분야는 농업, 문화, 자동차, 섬유 산업이라는 것이 WTO 분쟁해결 사건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한-EU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EU의 관심사안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¹¹

¹¹ 본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단체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국제 곡물가격 변동과 EU 곡물산업의 미래

EU grains industry and changes in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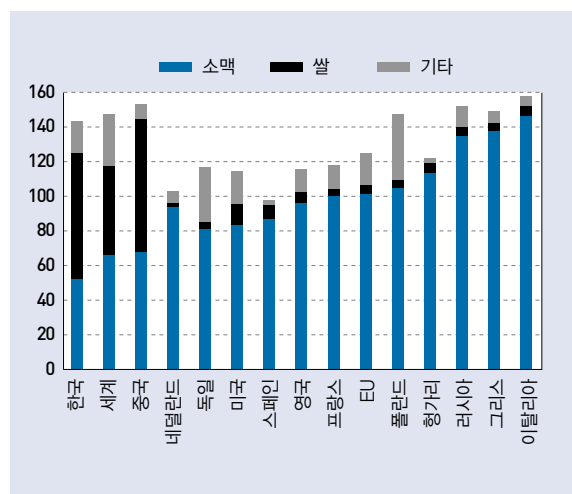
Global grain prices rose at an unprecedented pace between 2000 and 2008, but they started to decline as the financial crisis hit the global economy. After a short period of stability, cereal prices have started to rise again as a result of a supply shock. It was triggered when Russia announced that it was banning its wheat exports after its crops were destroyed by wildfires and drought. The rising grain prices will not affect the EU as much as they did in 2007 as it depends heavily on its internal producers and the world grain stocks are at a relatively high level. Volatile cereal prices should speed up the EU in securing its future supply, which is expected to rise as the production of biofuels expands, and in reforming its agricultural policies. Pro-market member states are arguing that the budget fo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should shrink further. In terms of its components, there is a general support for expanding pro-environmental policies 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while shrinking direct subsidies to producers. Intense negotiations will begin at the end of this year when the Commission publishes its communication on CAP post-2013.

2000년대 EU 곡물가격 변화

EU의 연간 1인당 내수용 곡물 공급량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나 내수용 소맥 공급량은 세계 평균에 비해 50% 이상 많은 103kg이다. 파스타를 즐겨먹는 이탈리아와 거의 모든 음식을 피타 빵과 같이 먹는 그리스의 경우 내수용 소맥 공급량이 130kg을 넘는다. 또한 체코, 아일랜드, 독일 사람들은 세계 평균보다 4~6배 많은 양의 맥주를 마셔 EU의 1인당 내수용 맥주 공급량은 세계 평균의 3배 가까이 된다.

2000년대 신흥국의 곡물 수요 증가와 높은 유가로 인해 바이오 연료 수요가 증가하며 곡물가격은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¹ 2000~2008년 사이 곡물가격은 2.8배 상승했고 소맥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07년 7월 EU의 곡물 재고량은 전년동월 대비 1,320만 톤 감소했고, 2007년 생산량은 기상 악화로 인해 전년 대비 760만 톤 줄어들었다. 곡물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2008년 6월 30일까지 귀리, 메밀, 조를 제외한 곡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정책안이 2007년 12월 EU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08년 곡물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EU집행위는 수입관세 철폐조치가 2009년 6월 30일까지 유지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메밀과 조에 대한 관세도 철폐한다고 발표했다.²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 2%대를 기록하던 EU의 곡물 및 빵의 가격상승률은 2008년 10%까지 치솟았다. 이후 2008/09년 세계 곡물 생산량과 소맥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1.5억 톤과 0.7억 톤 증가하여 2009년 곡물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EU의 곡물 및 빵 물가

★ 2007년 주요국의 연간 1인당 내수용 곡물 공급량 (kg)



주: 1) 생산+수입-수출+재고변화로 산출
2) 맥주소비는 제외
자료: FAOSTAT, Supply for domestic uti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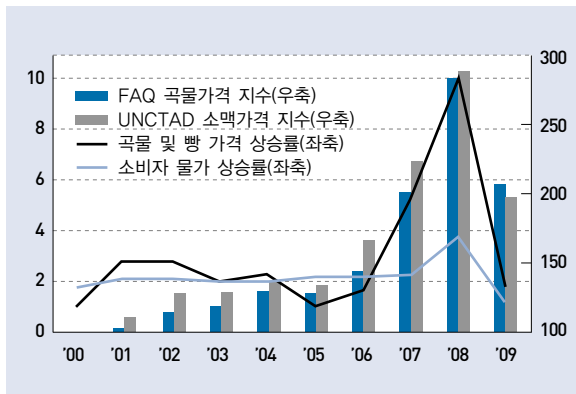
¹ 김화년 외 (2010), "글로벌 식량공급 불안, 한국경제를 위협하는가?" (CEO Information 제770호), 삼성경제연구소.
² EUROPA: Press release (2007, 12, 20.), IP/07/1977 Agriculture: European Union suspends import duties on most cereals.; EUROPA: Press release (2008, 6, 13.), IP/08/930 EU to maintain suspension of import duties on cereals, Press Release.





★ 국제 곡물가격 변화 및 EU 물가상승률

(% , 2000=100)



주: 소맥가격은 US FOB Gulf, no.2 Hard Red Winter 기준
 자료: Eurostat; FAQ, food price index; UNCTAD, Commodity Price Statistics.

도 안정세를 찾았다.

그러나 2010년 여름 세계 소맥 생산량의 9%(2009년 기준)를 차지하는 러시아에서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화재가 이어지며 국제 곡물시장이 다시 불안해졌다. 9월 1일 FAO는 2010/11년 세계 소맥 생산량을 6월 전망치에서 3,100만 톤 하향 조정된 6.46억 톤으로 발표했다. 러시아가 곡물 수출규제를 확대하자 소맥을 비롯한 곡물가격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소맥 근월물 가격은 6월 1부셸당 4.28달러까지 하락한 후 8월 5일 7.86달러로 급상승했다.

EU는 국제 소맥가격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 1월과 2010년 1월 사이 EU내 소맥가격 변동성은 0.096으로 국제가격 변동성(0.080)보다 높았다.³ 2010년 하반기 러시아의 곡물 수출규제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EU의 곡물 및 빵 가

격상승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05년과 2009년 사이 EU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평균적으로 총 역외 곡물수입의 5.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소맥가격은 2008년 최고치에 비해 40% 이상 낮은 수준이고, 2009/10년 세계 소맥 재고량은 전년 대비 2,000만 톤 증가한 1.99억 톤으로 EU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곡물 생산량 및 동유럽 신규 회원국들을 통한 역내 위험 분산

2009년 EU의 곡물 생산량은 세계 총 곡물 생산량의 12.0%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19.4%)과 미국(16.9%)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곡물을 생산한 것이다. 특히 소맥은 EU가 세계 최대 생산지로 세계 총 생산량의 20.3%를 차지했다. 하지만 쌀과 소맥을 제외한 기타 곡물은 미국 생산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9%를 차지했다.

EU의 곡물재배 농지 면적이 세계 곡물재배 농지 면적의 8.3%, 소맥재배 농지 면적이 세계 소맥재배 농지 면적의 11.4%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EU의 토지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EU의 곡물재배 토지 생산성은 1헥타르당 5.1톤으로 세계 생산성의 1.4배 수준이고, 소맥재배의 경우 1.8배 수준인 5.4톤이다. 개별 국가로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생산성이 1헥타르당 9톤이 넘고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은 7톤이 넘는다. 소맥재배 토지 생산성은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가 8.1~9.4톤을 기록하는 등 8개 EU 국가들이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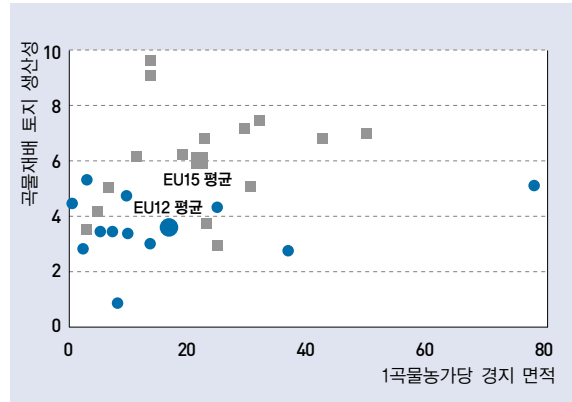
EU 신규 회원국(EU12)⁴들이 EU 총 곡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과 2009년 사이 평균 27%에 달한다. 향후 EU 12개 회원국들의 비중은 점

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2010년과 2015년 사이 EU15의 연질(soft) 소맥 생산 증가율을 연 5%로 전망하는 반면, EU12의 증가율은 10%로 전망했다.⁵

EU12의 최대 곡물 생산국인 폴란드(2009년 기준 EU 내 3위)와 루마니아(7위)의 곡물재배 토지 생산성은 각각 1헥타르당 3.5톤과 2.8톤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헝가리(8위)와 체코(10위)의 생산성이 각각 4.7톤과 5.1톤인 점을 고려해보면 꾸준한 투자와 기술이전을 통해 동유럽 회원국들의 농업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곡물산업의 기업화를 통해 영농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 농가당 곡물 재배면적(2007년)과 토지생산성(2009년)

(x축: 헥타르, y축: 1헥타르당 톤)



자료: Eurostat; FAOSTAT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 생산량 변동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유럽의 곡물산업 성장은 EU의 위험 분산과 곡물 공급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스페인에서는 3월까지 눈이 내렸고 영국, 프랑스 서부, 독일 북부, 폴란드 동부,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봄과 초여름에 강수량이 매우 낮았다. 또한 동유럽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여 2010년 EU 곡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EU집행위 산하 합동연구소는 역내 기타 지역에서는 풍년이 들어 곡물 생산량이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연질 소맥, 보리, 옥수수의 토지 생산성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치 대비 각각 1.7%, 4.4%,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⁶

EU의 곡물 수출입 현황

2000년대 초 흑자를 기록하던 EU의 곡물 역외 무역수지는 2002년과 2004년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7년 EU의 곡물 생산량은 2004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든 2.6억 톤이었고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인 766만 톤(17.2억 유로)을 기록했다. 2007년 말 이후 곡물 시장이 불안해지며 주요 곡물생산국들의 수출규제는 강화되었고 EU의 곡물 수입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곡물 수입에서 역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82%에서 2007년 67%로 감소했으나 2009년에는 83%로 급증하며 역내의존도가 높아졌다. 2009년 역내 곡물(HS코드: 10) 수입량은 전년 대비 20.5% 증가한 반면, 역외수입량은 51% 감소했다. 밀과 메슬린(HS코드: 1001)의 역내수입량은 25.1% 증가했고, 역외수입량은 6.6% 감소했다.

EU가 확대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EU의 주요수입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EU12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2000년 총 곡물수입의 3.7%에서 2002~2004년 6%대로 증가했다. 2004년 이후 12개 유럽 국가들이 새로 EU에 가입하며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EU12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³ OECD-FAO (2010). Agricultural Outlook 2010-2019. 예측 가능한 요소를 제외한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눠 변동계수를 산출. European Commission (2010). Commodity price volatility: International and EU perspective.에서는 표준편차를 예측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2004년 1월과 2010년 5월 사이 EU내 소맥가격의 변동계수가 국제가격의 변동계수보다 낮게 측정됨.

⁴ 2004년에 가입한 10개 회원국과 2007년에 가입한 2개 회원국을 통칭상 1999년부터 EU에 포함시킴.

⁵ European Commission (2009). Prospects for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in the European 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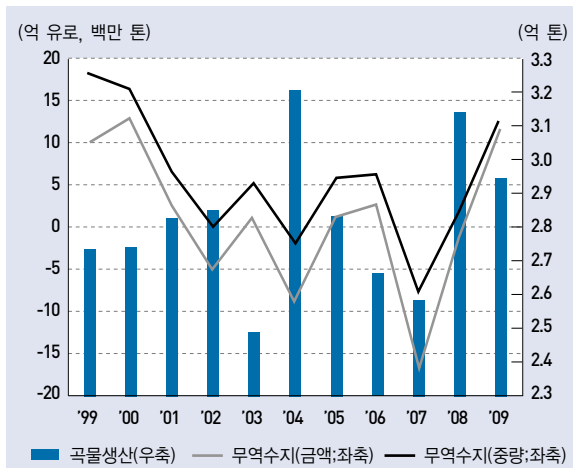
⁶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2010). European Commission forecasts average crop production for 2010 in the EU despite extreme weather.





15%, 2009년 26%로 급증했다. 2009년 EU는 총 곡물 수입의 4.1%를 체코로부터, 3.4%를 각각 폴란드와 루마니아로부터, 3.2%를 불가리아로부터 수입했다.

★ 2000년대 EU 곡물 역외 무역수지 및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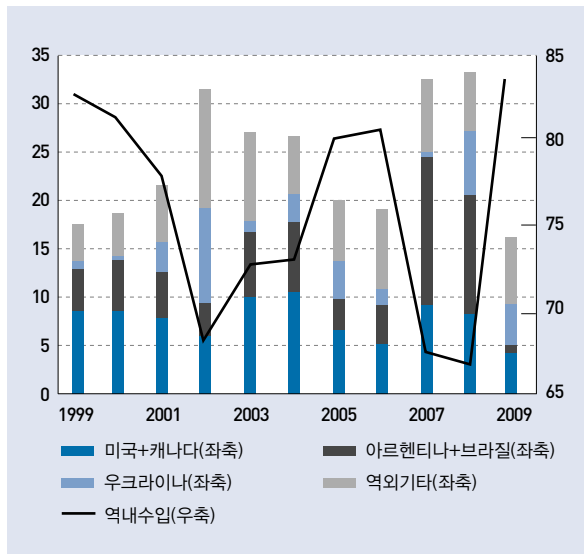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EU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EU의 중요한 곡물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재배 토지 생산성은 1999년 1헥타르당 2.0톤에서 2008년 3.5톤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총 곡물 생산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20위권에서 9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EU 곡물 수입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한 비중은 0.6%에서 6.2%로 증가했다. 2008년 EU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역외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양의 곡물과 최대 규모의 소맥을 수입했다.⁷ 2009년 EU의 주요 역외 곡물 수입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량이 각각 전년 대비 92%, 93%, 81% 감소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량 감소폭

⁷ 2008년 역외수입 중량 기준.

은 34%에 그치며 우크라이나는 EU의 최대 곡물 수입국이 되었다. 2009년 우크라이나는 EU 총 곡물수입의 4.2%(역외수입의 25.3%)를 차지했다.

★ EU 역내곡물수입 및 주요 역외수입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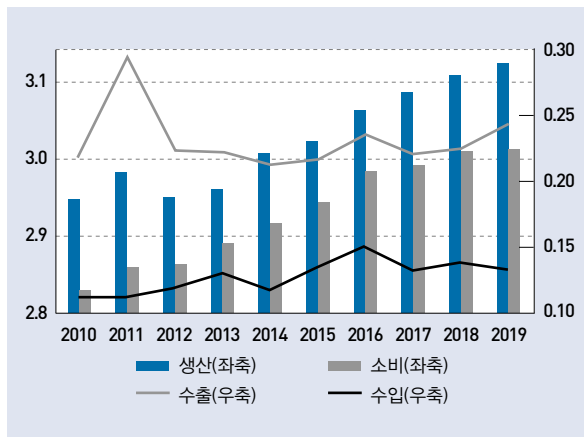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EU와 우크라이나는 「우호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대체할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05년부터 무역규제를 완화시킨 결과 2008년 WTO에 성공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고, 가입 후 EU와의 무역협정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9월 13일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견하고 난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EU와의 자유무역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對EU 수출을 두 배 이상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11월 22일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⁸ 우크라이나와의 경제협력 강화는 EU의 곡물 공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곡물 및 바이오 연료 산업 전망

OECD-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과 2019년 사이 EU의 농지규모는 83.4만 헥타르 증가하고 곡물⁹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1,80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매년 800만~1,000만 톤 규모의 곡물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약 5,000만 톤의 재고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맥재배 토지 생산성은 2010년대 초 1헥타르당 5.4톤에서 2019년 5.6톤으로, 조곡재배 생산성은 4.8톤에서 5.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010~2019년 EU 곡물 시장 전망



자료: OECD-FAO (2010), Agricultural Outlook 2010-2019.

⁸ EUROPA: Press release. (2010. 9. 13.). Statement by President Barroso following his meeting with Viktor Yanukovich, President of Ukraine: SPEECH/10/421.

⁹ 곡물=소맥+쌀+조곡(Coarse grain)

¹⁰ European parliament, Council (2003. 5. 17.). Directive 2003/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May 2003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biofuels or other renewable fuels for transport.

¹¹ EurObserv'ER (2010. 7.). Biofuels Barometer.

¹² European parliament, Council (2009. 6. 5.).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중장기적으로 EU 곡물시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이오 연료 시장의 확대일 것이다. EU의 곡물 생산과 소비에서 바이오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2009년 EU는 95.7억 리터의 바이오 디젤과 57.6억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했고, 2019년에는 각각 205.2억 리터와 179.9억 리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바이오 연료 사용비율은 2005년 1.1%에서 2009년 4.0%로 빠르게 증가했다. 2003년 '바이오 연료 사용증진을 위한 지침'¹⁰은 2010년 말 바이오 연료 사용비율 목표치를 5.75%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이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연구 자료는 EU의 2010년 바이오 연료 비중을 4.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¹¹ EU의 '재생에너지 사용증진을 위한 지침'은 EU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목표치를 20%로, 운송 분야의 재생에너지 연료 비율 목표치를 10%로 설정하고 있다.¹² OECD-FAO는 2019년 바이오 디젤이 EU의 디젤류 연료사용 중 9.8%를 차지하고, 에탄올이 가솔린류 연료사용 중 1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³ EU 바이오 연료시장의 확대와 함께 식량이 아닌 다른 목적의 곡물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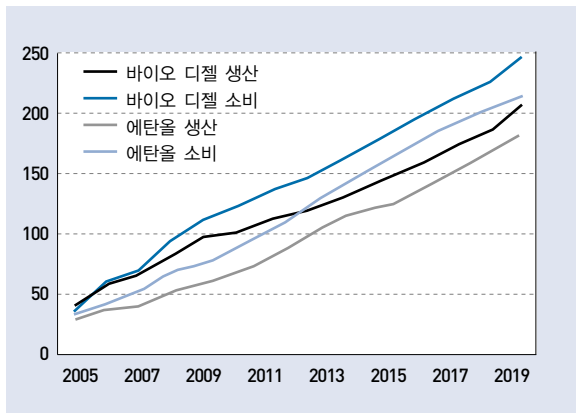
이렇듯 EU의 바이오 연료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역내 수급차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OECD-FAO는 EU 내 바이오 디젤 소비와 생산의 차이가 2005년 0.2억 리터에서 2010년 20.1억 리터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38.4억 리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탄올은 2005년 5.5억 리터에서 2010년 19.8억 리터로, 2019년에는 32.3억 리터로 증가할 것이다. EU는 2019년 세계 바이오 디젤 생산의 50%와 소비의 59%를, 에탄올 생산의 11%와 소비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¹³ 부피기준, 에너지 기준으로는 각각 8.0%와 8.5%를 차지.





★ 2010~2019년 EU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소비 전망 (억 리터)



자료: OECD-FAO (2010), Agricultural Outlook 2010-2019.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출입규제조치는 역내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바이오 연료생산에 사용되는 곡물가격의 급등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바이오 연료를 둘러싼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유럽 바이오 디젤 위원회(EBB: European Biodiesel Board)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EU의 바이오 디젤 생산 증가율은 16.6%로 2008년 (35.7%)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EBB는 미국업체들의 반덤핑 규정 위반과 제3국 위장법인을 통한 상계 관세 회피를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EU집행위는 2009년 5월 미국산 바이오 디젤에 대해 최고 5년까지 반(反)보조금 조치를 취했으나 EU 바이오 연료산업은 여전히 원료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EU 내 바이오 디젤 생산 3위인 이탈리아의 2010년 상반기 생산량은 1년 전과 비교해 50% 수준으로 감소했음이 이를 시사한다. 이탈리아 바이오연료산업협회장은 2010년 생산이 전년 대비 60~7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¹⁴

EU 국가들이 바이오 연료와 관련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어 곡물 수요에 대한 정확

한 전망은 어렵다.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급증이 2007~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의 주원인이었다는 주장¹⁵과 바이오 연료가 생산과정에서 석유보다 환경에 더욱 큰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¹⁶로 인해 EU의 바이오 연료생산 지원 및 소비 목표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U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관련 정책이 불확실해질 경우 곡물가격 변동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EU는 단순한 목표치 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연료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바이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U의 공동농업정책과 농업지원 국제비교

1962년에 시행된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EU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이기도 하지만 EU 국가 간 마찰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1980년대 영국과 네덜란드와 같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은 EU 내 농산물 생산과잉과 EU 농업의 비효율성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1984년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저릿 대처는 CAP로부터 영국이 얻는 이득이 적다고 주장하여 예산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예외(rebate)를 인정받았다.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4년)에서 농업지원금에 대한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며 농업지원금 축소가 불가피했다. 결과적으로 EU 예산에서 CAP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4년 71%에서 2010년 42%(595억 유로)로 크게 하락했다.

¹⁵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연료 생산에 따른 영향이 2002년 1월과 2008년 6월 사이 국제 식량 가격 인상의 70~75%를 설명한다고 함 (Mitchell, D. (2008, 7.). A note on rising food pric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682.)

¹⁶ 아자기름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벌채하고 아자수 농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영국 교통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31% 증가한다고 함 (Green fuels cause more harm than fossil fuels, according to report, (2010, 3. 1.). The Times.

¹⁴ Italy 2010 biodiesel output to fall 60 to 70 percent, (2010, 7. 8.), Reuters.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CAP 예산에서 수출보조금과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농가직접지불과 농촌개발지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개혁안(The Health Check of the CAP)은 2008년 11월 19일 합의되었다.¹⁷ 곡물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는 1) 특정 제품 생산과 연계되어 있던 보조금을 분리하고 단일 지불제(Single payment scheme)로 전환, 2) 농가 직접지불제도 축소와 농촌개발지원 확대, 3) 곡물생산 극대화를 위해 10% 휴경지 유지조건 폐지, 4) 정부가 개입기간 동안 소맥 1톤당 101.31유로로 구매하던 것을 최대 300만 톤까지로 제한하고 추가적으로는 입찰을 통해 구매, 5) 에너지 작물 프리미엄 폐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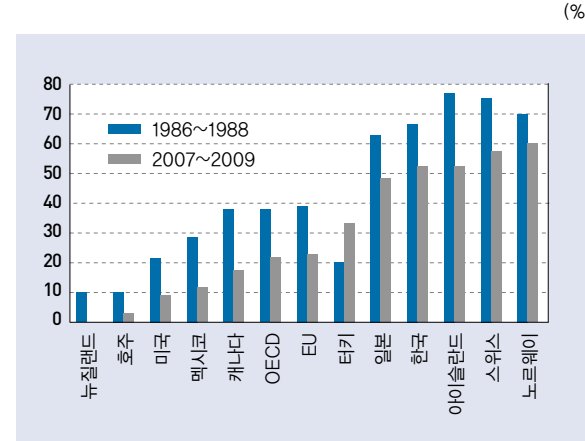
EU의 농업지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하는 농업생산자 지원금 추정치(PSE: Producer Support Estimates)는 농업지원 정책을 통해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로 이전된 총액을 뜻한다. 2009년 EU의 PSE는 미국의 4배 규모인 869.8억 유로로 OECD국가들의 총 PSE 중 48%를 차지했다. PSE를 총 농가 수령액으로 나눈 수치를 비교해보면 EU는 2007년과 2009년 사이 OECD 평균보다 높은 23%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2.5배가 넘는 수준이다. 1986~1988년 EU의 농산물 판매가격은 국제시장에 비해 71% 높았다. 2007~2009년에는 9%로 크게 하락했으나 여전히 뉴질랜드, 호주,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동농업정책의 미래와 EU 곡물산업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EU 농업정책의 시장 친화적 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말부터 2014~2020년 예산계획 수립에 대한 EU 회원국들

¹⁷ EUROPA: Press release (2008, 11, 20.). Agriculture: CAP Health Check will help farmers meet new challenges. IP/08/1749.

★ 농가 수령액 대비 농업 생산자 지원금 추정치 (%)



자료: OECD (2010), PSE/CSE database.

의 조율이 시작된다. 이에 앞서 야누스 레반도스키 EU 예산 집행위원은 CAP를 EU예산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4월과 6월 사이 EU집행위는 'CAP Post-2013'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총 5,700여 건의 정책제안을 수렴하였다. EU집행위는 11월 17일까지 농업정책제안서를 마련하고 향후 2년간 의회 및 이사회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2013년에는 EU 농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CAP가 채택될 예정인데, 앞에서 언급한 곡물가격 불안정, 동유럽 회원국들의 곡물산업 발전, EU의 친환경 전략이 CAP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EU의 곡물산업에 영향을 미칠 이슈를 아래의 3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먼저 지난 3~4년간 곡물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곡물의 역내공급 확대가 중요한 이슈이다. 향후 EU 신규 회원국들의 곡물재배 생산성이 증대되며 역내 곡물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 협상 시 동유럽 회원국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이들 국가에 대한 농업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프랑스는 CAP 예산 축소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10년 내에 프랑스가 CAP로부터 얻는 혜택은 프랑스의 기여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기





적으로 CAP의 가장 큰 수혜국인 프랑스의 입장 변화가 관건이다.

둘째, 향후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¹⁸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AP의 친환경정책예산(Life+)은 3억 유로에 불과하다. 이미 EU의 여러 선진국들은 CAP의 친환경적 정책을 지지하며 농가직접지불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농업정책을 환경정책과 결합시켜 EU 농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또 앞으로는 농촌개발정책과 EU 2020 경제발전 전략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다. 농촌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은 CAP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촌경제 다변화가 강조되며 EU 곡물산업의 생산과정이 점차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2차 바이오 연료 개발(곡물, 사탕수수 및 식물성 기름이 아닌 나무와 풀과 같은 목질 섬유소를 포함한 바이오매스를 사용)에 필요한 EU의 R&D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량과 경합하지 않는 2차 바이오 연료 생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EU 내에서는 바이오 연료 사용 목표치 설정을 넘어서서 온실가스 배출감소 효과가 훨씬 높은 2차 바이오 연료 사용 목표치를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생산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생산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없다. 2차 바이오 연료 개발에 대한 R&D 확대가 EU 내 곡물 수급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¹⁸ 유럽환경정책연구소는 농업의 10대 공익적 기능을 발표 (Cooper, T. et al. (2009. 12.), Provision of Public Goods through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European Environmental Policy).

리스본조약의 입법절차 변화로 유럽의회의 입법 권한 강화

Amendments of EU legislation procedures in the Lisbon Treaty

The Treaty of Lisbon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1 2009. Every proposal of new European law is based on a specific treaty article and this legal basis determines which legislative procedure must be followed. The Lisbon Treaty aims to solve the problem of democratic deficit by reforming EU's legal acts and legislation procedures. Key amendments include the strengthening of equality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Council and the removal of Commission's virtual monopoly in submitting legislative proposals. Also, the influence of member countries' national parliaments will rise along with that of the European Parliament. Various stakeholde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a strengthened European Parliament.

리스본조약의 입법행위 유형과 제정 절차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발효되었다. 리스본 조약의 제1조와 제2조는 'EU 조약의 개정' 및 'EC 설립조약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리스본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2008년 5월 9일, EU는 관보(Official Journal)를 통하여 'EU 조약'과 'EU 운영조약' 통합본(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TEU)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2008/C115/01)¹을 공표하였다. 그 후 이 통합본은 일부 수정되어 2010년 3월 30일자로 재공표되었다.²

TFEU 제288조는 니스조약 체제하에서 인정되고 있던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및 견해(opinion)의 다섯 가지 EU법의 2차입법의 명칭과 유형, 그리고 그 성질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이 가운데 '결정'에 관한 규정이 주목을 끈다. 즉, 기존의 유럽공동체설립조약(TEC) 제249조에 의하면, '결정'은 "오직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A decis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upon those to whom it is addressed)" 입법형태이다. 그러나 리스본조약은 TFEU 제288조에서 "결정은 완전한 구속력이 있다"고 전제한 후 그 적용 대상이 특정된 경우에는 "오직 그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A decis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 decision which specifies those to whom it is addressed shall be binding only on them.)"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은 제정 방식에 따라 법적 행위를 입법행위(legislative acts)와 비입법행위(non-legislative acts)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TFEU 제289조 3항에 의하면 '입법절차에 따라 채택되는 법적 행위'가 바로 '입법 행위'이다("Legal acts adopted by legislative procedure shall constitute legislative acts"). 따라서 입법행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리스본조약에 정해진 입법절차에 따라 채택된 법적 행위여야 한다.

입법절차는 '보통입법절차(OLP: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와 '특별입법절차(SLP: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OLP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공동으로 규칙, 지침 또는 결정을 채택하는 절차를 말하고³ SLP는 "제 조약에서 정하는 특정한 경우(In the specific cases provided for by the Treaties)" 이사회와 함께 유럽의회가, 또는

¹ European Union, (2008),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08/C 115/01.

² TEU와 TFEU, 그리고 EU 기본권헌장이 한글로 번역·출간되었다. 채형복 (2010), 『영한대역 리스본조약』, 서울: 국제환경경제 기업지원센터, p. 527; 채형복 (2010), 『리스본조약』, 서울: 국제환경경제 기업지원센터, p. 329.

³ TFEU 제289조 1항





유럽의회의 참가와 함께 이사회가 규칙, 지침 또는 결정을 채택하는 절차를 말한다.⁴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입법절차 외에도 ‘개별입법절차(ILP: individual legislative procedure)’가 규정되어 있다. ILP는 OLP와 SLP에 의거하지 않고도 입법행위를 채택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입법절차에 의해 채택되는 법적 행위인 규칙, 지침 및 결정이 바로 입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외의 행위는 모두 비입법행위로 간주된다.

보통입법절차

리스본조약 이전, 즉 니스조약 체제하에서는 협의절차(consultation procedure), 협력절차(cooperation procedure),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 및 동의절차(assent procedure)가 입법절차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단일유럽협정(SEA: Single European Act)에 의해 도입된 협력절차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리스본조약에 협력절차에 관한 기존의 TEC 제252조를 삭제함으로써 이 절차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협의절차와 동의절차는 SLP에 포함되어 적용되고, 공동결정절차는 수정·보완되어 OLP(보통입법절차)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유지·존속되게 되었다(아래 표). 그리하여 OLP는 기존의 공동결정절차가 적용되던 40개 분야에 33개를 더하여 총 73개 분야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OLP는 기존의 공동결정절차와 마찬가지로 집행위원회 등의 제안에 의거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규칙, 지침 또는 결정을 공동으로 채택하는 입법절차다.

★ EU 입법절차의 변천

니스조약	리스본조약
협력절차	폐지
공동결정절차	보통입법절차
협의절차	특별입법절차
동의절차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FEU 제294조는 OLP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OLP는 기존의 공동결정절차를 실질적으로 승계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첫째, 기존의 공동결정절차의 경우, 집행위원회만이 법안을 제안(발의)할 수 있었다. 이것이 소위 집행위원회의 ‘독점적 제안권’이다. 그러나 리스본조약은 법안 제안 혹은 발의에 있어 집행위원회가 누리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있다. 즉, 이제는 일정 수 이상의 회원국(회원국단, a group of Member States) 또는 유럽의회도 발의를 할 수 있고, 유럽중앙은행의 권고 또는 사법재판소와 유럽투자은행의 요청에 의해서도 입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게 되었다.⁵

둘째, OLP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내용은 바로 3독 회제를 통하여 유럽의회가 이사회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공동결정절차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EC 차원에서 유일한 입법주체는 이사회였다. 그러나 유럽의회의 입법행위 참가가 확보됨으로써 이사회와 더불어 유럽의회는 공동입법주체가 되었다. 그런데 리스본조약은 OLP에서 입법 과정을 〈제1독회〉, 〈제2독회〉, 〈조정절차〉 및 〈제3독회〉로 나누고, 각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입법권한을 이사회와 대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럽의회는 EU의 입법 과정에서 이사회와 더불어 공동입법자(共同立法者), 다시 말하여 EU의 입법당국의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럽의회의 입법 권한이 가지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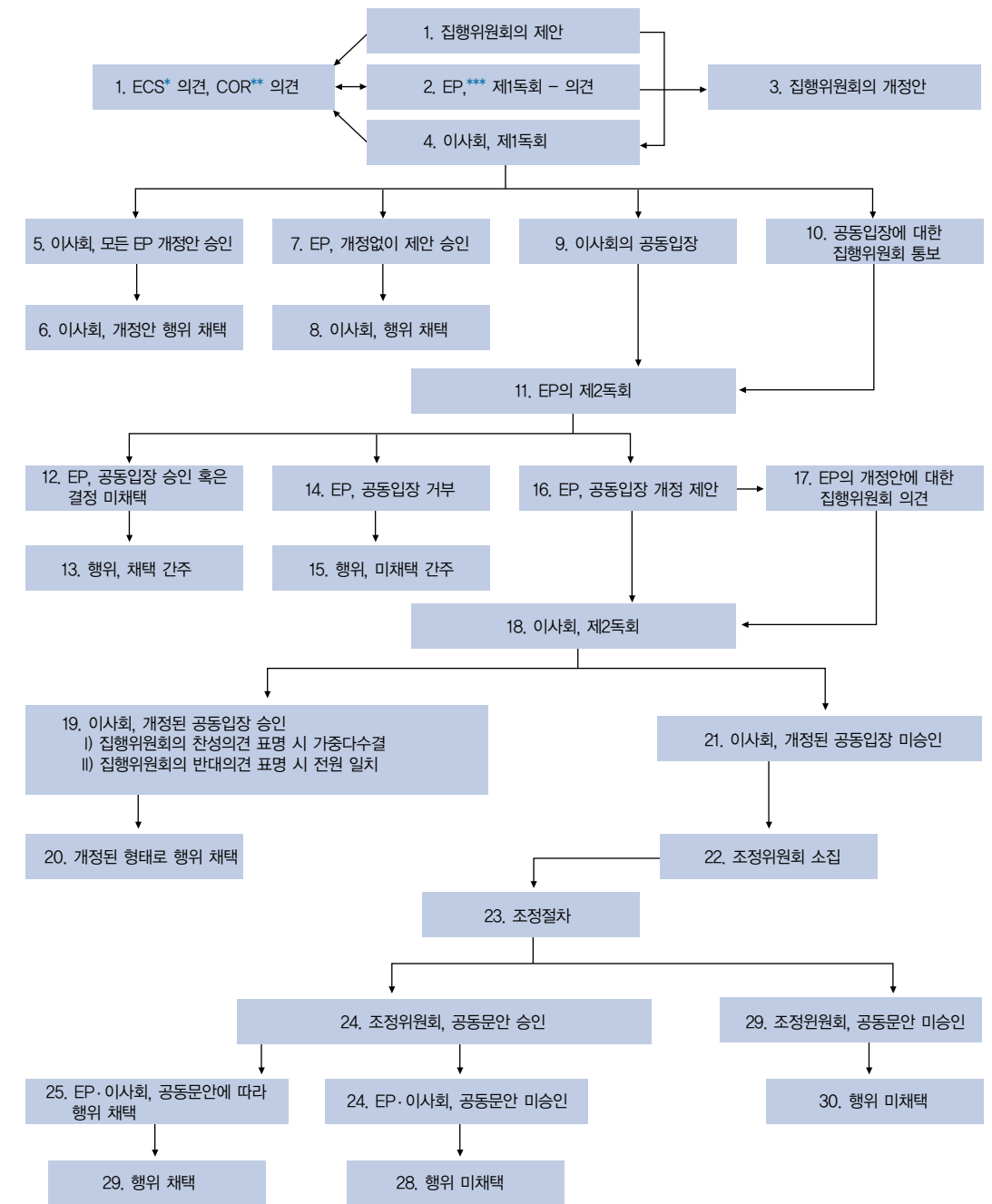
리스본조약은 법적 행위와 제정 절차 개혁을 통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민주성 결핍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리스본조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유럽의회가 이사회와 더불어 EU의 입법기관

⁴ TFEU 제289조 2항

⁵ TFEU 제289조 4항

★ EU 입법절차의 변천



* ECS: 경제사회위원회

** COR: 지역위원회

*** EP: 유럽의회





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특히 OLP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제1독회, 제2독회, 조정절차 및 제3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태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안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기존과 같이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양대 기관에 의한 ‘법률안 제안-채택’이라는 구도에 의해 EU 차원의 법률이 제정될 수는 없게 되었다.

둘째, 집행위원회에 의한 ‘독점적 법안 제안권’이 행사될 수 없다. 리스본조약하에서는 집행위원회만이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회원국과 유럽의회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또한 비록 간접적 제안권의 형태로 규정되고 있지만 시민에 의한 발의권도 보장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럽의회와 더불어 각 회원국의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리스본조약은 각국의회에 관한 두 개의 의정서를 첨부하여 입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국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EU 차원에서 법안이 제출되게 되면, 반드시 각국의 회에도 송부되어야 한다. 만일 그 송부된 법안에 대해 각국의회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 EU 전체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입법 과정에서 EU 기관의 입장만이 아니라 각 회원국 의회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U의 공동이민제한정책은 계속될 것인가?

EU's Common Immigration Policy

Several EU member countries, such as France, United Kingdom and Italy, are strengthening their immigration policies. It was decided in the Amsterdam Treaty that the Community method would be applied to EU's immigration policies. There was a further development at the Tampere European Council in 1999 where the discussion was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illegal immigrants. The establishment of the EU's immigration policy has continued since and a number of EU immigration laws, such as the "Return Directive" on procedures for illegally third-country nationals, have been strengthened. However, with the Lisbon Treaty now in effect, legal obligations for protecting and treating third-country nationals fairly have strengthened. Also, the Treaty extends the qualified majority voting of the Council to asylum and immigration policy areas and it is encouraging that the EU immigration policy is now subject to the co-decision procedure.

개별국가의 이민제한정책

유럽 각국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이민통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현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내무장관에 재임 중이던 2003년과 2006년에 두 차례 중요 이민법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7년도에는 「오르트퐁(Hortefeux)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이민법 개정은 이민자 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목표이다.

프랑스가 2010년 여름에 발표한 일명, 로마(Roma)라고 불리는 집시 추방령은 EU 회원국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브리스 오르트퐁 프랑스 내무장관은 8월 한 달 동안 강제 추방된 집시의 수가 977명에 이르렀으며, 이 같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¹ 이에 9월에는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인 비비안 래딩이 집시 추방령을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행위와 비교하는 등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나라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보수당 당수 시절 정권에 오르면 이민자 수를 75%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2010년 6월에 EU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를 1990년대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곧이어 노동이민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이는 2011년 4월로 예정된 이민자 수 제한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노동이민자가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해진

조치다. 이에 대해 고등교육계는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영국 대학교의 성공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²

이탈리아의 최남단 칼리브리아(Calabria)의 로자르노(Rosarno)에서는 2010년 1월 불법체류자인 나이지리아인과 정식 거주증을 가진 토고 출신 이주노동자가 주민의 총에 맞아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폭동을 촉발했으며, 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무리한 진압을 한 결과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거주증이 없는 이주노동자를 임시 수용센터로 이송했으며, 정식 체류증이 있는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인종소요사태인 1960년도 미국의 KKK 사태에 비견될 만한 인종차별 분위기에 위협을 받아 반강제적으로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속해 있는 포르자 이탈리아당의 연정 동반자인 북부동맹(Lega Nord)은 외국인 배격주의를 표방하는데 로베르토 마로니 내무장관이 바로 북부동맹 출신이다. 마로니는 치

¹ France Depots 977 Gypsies. (2010. 8. 31.). AP.

² UK VISA BUREAU (2010). UK immigration caps on non-EU applicants may harm universities. <<http://www.visabureau.com/uk/news/07-09-2010/uk-immigration-caps-on-non-eu-applicants-may-harm-universities.aspx>> (2010. 9. 30.).





안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웠으며, 2008년 5월에는 불법 체류자의 추방과 억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치안패키지(Security package) 법률안」을 채택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비유럽권 시민의 대량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이탈리아 전역에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여 무장한 경찰이 활보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북부동맹은 2009년에(비록 부결되었긴 했지만) 정식체류증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이를 신고하도록 치안패키지를 수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EU 차원의 대응

유럽의 이민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다루졌던 영역이다. 하지만 이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마스트리히트 조약부터 EU 차원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졌다. 1997년 체결된 암스테르담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세 번째에 머물던 이민망명정책을 첫 번째, 즉 공동체적 방식(community method)으로 편입시켰다. 1999년 탐페레(Tampere) 정상회담에서는 암스테르담 조약 타이틀 4(Title IV)의 '자유, 안전, 정의지대(Area for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형성을 가속화할 것을 결의하고 향후 5년 내에 이 부문에서 공동정책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다. 2004년 헤이그(Hague) 정상회담에서는 유럽난민기금(European Refugee Fund)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민문제가 EU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초점은 불법이민 문제에 맞춰졌다. 이는 9·11 사태 이후 2002년에 EU가 “불법이민과 인신매매 추방을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을 도입함으로써 더 강화되었다. 이사회는 2004년 결정(Decision)³으로 두 개 이상의 나라에서 제3국의 시민을 강제 이송해야 할 경우 공동으로 비행기 편을 마련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같은 해에는 EU의 외부국경을 통제하는 국경협력기구인 유럽국경감시청(FRONTEX)이 설치되어 육로뿐 아니라 해안이나 비행기 유입로를 순찰해 불법유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 규

정(Regulation) 2007/2004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럽국경감시청은 본 규정 제9조에 의해 공동송환조치(Joint return operation) 시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권한도 지니고 있다. 2008년도에는 일명 송환지침(Return Directive)⁴을 채택하여 불법이민자 추방 시의 다양한 원칙을 수립하였다.

한편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민정책의 공동체화(communitarisation)를 가능하게 한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도 불법이민과 망명정책만을 가중다수결제와 유럽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co-decision)해 놓았다. 합법이민에 대한 의사결정방식은 각료이사회에서의 만장일치제와 유럽의회 자문(consul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각료이사회 결정에 따르고 있다. 합법이민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만큼 개별회원국의 권한이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이민에서도 진척사항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가족재결합에 관한 지침서⁵와 제3국인의 장기체류 지위에 관한 지침서⁶를 들 수 있다.

EU 정책의 문제점

불법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은 각국이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제3국의 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인권과 공정한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EU 차원의 대처방식도 인권단체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2008년 송환 지침은 불법체류

³ European Commission (2004). Decision 2004/573/EC on the organization of joint flights for removals from the territory of two or more Member States of third-country nationals who are subject of individual removal orders.

⁴ European Commission (2008). Directive 2008/115/EC of common standards and procedures in Member States for returning illegally staying third-country nationals.

⁵ European Commission (2003). Directive 2003/86/EC on the right of family reunification.

⁶ European Commission (2003). Directive 2003/109/EC concerning the status of third-country nationals who are long-term residents.

자를 안전한 곳으로 송환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송환을 당연시한다는 점, 억류(detention)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로 정한 점 그리고 강제추방 시 재입국불허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 점에서 회원국의 기존규정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했다는 비난⁷을 받고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들은 이를 ‘수치스러운’ 지침서라 비난하였고 특히 볼리비아는 유럽의회에 보낸 공개서신을 통해 ‘수년 동안 취직해서 사회에 통합되어가는 라틴 아메리카 동족들이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억류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문했다.⁸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의 일방적인 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즉, 난민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남아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이 지침서는 송환대상자를 ‘불법체류자(illegal stay)’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따라서 이미 일정국가의 역내에 도달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회원국 영내에 진입하지 못한 채 해상이나 항로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이들 중 난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권한은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송환지침 2.2.a조항). 해로를 통한 난민 유입이 증가한 시점에서 해안 순찰을 강화해 망명신청 기회조차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EU의 최근 이민정책 중 특이한 점은 제3국과의 재입국조약(readmission agreement)으로 이민억제 정책을 펼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접근방법인 경찰력을 통한 국경수비만으로는 한계를 느껴 제3국과의 공동협력을 통해서 불법이민을 차단하고자 새로운 수단을 고안했다. 탐페레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재입국조항(readmission clause)은 “협약 체결당사국이

해당 국민을 재입국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것”⁹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무국적자들(stateless persons)뿐 아니라 협약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이는 불법이민자들이 밀입국 시 주 통로로 이용하자는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와 같은 유럽의 인접국가 이외에도 홍콩, 중국,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국가와도 체결되어 대외협약에서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스페인,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지중해 국가들은 해로를 이용한 불법이민자의 대거 유입으로 골치를 앓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특히 많은 국가와 재입국협약을 맺고 있다.

이탈리아는 과거 식민지국가인 리비아와 2000년에 재입국협약을 맺어 1년 사이에 이탈리아로 유입하려는 사람이 50퍼센트나 줄어들었다.¹⁰ 스페인도 재입국허가 조약의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리비아는 더 큰 효과를 얻고 있다.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떠난 배가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하지 않고 해상에서 이탈리아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고 다시 리비아로 회항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리비아는 망명자가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지역분쟁으로 극심한 빈곤을 겪는 사하라 이남의 국가(차드, 수단, 나이지리아)와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은 리비아가 1951년 「제네바 난민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망명신청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리비아로 송환된 이민자에 대해 추방령을 중단시키는 긴급조항을 채택한 판례도 있

⁹ Roig, A. & Huddleston, T. (2007). EC Readmission Agreements: A Re-evaluation of the Political Impasse.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9(3), 363–387.

¹⁰ 50% drop in EU irregular migrant border crossings after Italy–Libya Pact. (2010. 8. 3.). *Euobserver.com*.

⁷ Amnesty International (2008). Report on the EU Return Directive.

⁸ Global outcry against EU immigration Directive (2008. 6. 19.). *Euobserver.com*.





다.¹¹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이탈리아를 방문한 2010년 8월 말 불법이민자의 유입으로 유럽이 ‘검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대신 매년 41억 유로를 요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¹²

EU 차원의 공동이민정책은 개별회원국의 이민제한정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한다. 비록 공동체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회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개별회원국의 이민억제정책에 이어 EU 차원의 이민정책이 이중 장벽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00년 보고서¹³에서 ‘숙련, 비숙련 노동자의 부족’으로 이민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숙련 이민자 뿐만 아니라 비숙련 이민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는 2006년 10월 발표된 EU 집행위원회 보고서¹⁴ <인구로 살펴본 유럽의 미래: 도전에서 기회로>에서 다시 한 번 EU가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치안과 이민문제를 연관시키는 사고방식과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선거 전략으로 삼으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합법이주노동자 지침서 초안¹⁵이 부결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EU도 이민문제에 있어 불법이민을 억제하

는 데만 주력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위의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유럽 사회는 이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4년도 헤이그 프로그램에 이은 2009년도 스톡홀름(Stockholm) 프로그램은 합법이민으로 ‘임시이민(temporary migration)’과 ‘순환이민(circular migration)’에 대해서 강조한다.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합법이민에 관해서도 가중다수결제가 채택되고 유럽의회와 공동결정 방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두 회원국 때문에 EU의 이민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의 가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3국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

박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EU센터 HK연구교수

유로화 회생을 위한 5가지 처방

5 solutions to fix the eurozone

The Centre for European Reform published an essay “How to save the euro” in September. The author argues that a shared currency will do more harm than good in a monetary union without a “very high degree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According to this report, eurozone’s low economic growth potential, rather than its fiscal situation, seems to be the major problem and therefore removing the obstacles blocking its long-run growth should be the priority in reforming the eurozone. However, the political will of individual member states is lacking. A rethink is necessary and solidarity with one another is required if the eurozone is to avoid a permanent crisis.

유럽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CER: Centre for European Reform)는 최근 위기를 맞은 유로화와 유로존의 회생 방안을 분석해놓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로화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How to save the euro)>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유로화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회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치적 노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통합과 경제 개혁이 결여된 통화통합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것이다.

먼저, 보고서는 유로화의 문제는 유럽 통합이라는 화려한 ‘수사학’과 실제 여러 국가의 통화가 통합된 데 따른 여러 문제점 간의 간극이라고 진단한다. 통화를 통합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 잔존하는 갖가지 위험성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인플레이션 위험성이나 높은 임금 상승률 등이 다른 국가와의 경제통합으로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통합의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통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정책 조율이나 이를 집행할 예산 마련은 정치통합의 핵심이다.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현재까지도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경제 사정은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¹ 즉,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통합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로화 통합

이후 약 10년간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유럽 통합이라는 ‘수사학’에 가려져 하나의 유럽, 하나의 유로화 경제에 대한 이상적 통합관점이 이러한 개별국 분석을 저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 지역의 재정위기가 심화되자 ‘유로화의 위기’라는 화두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때 통화통합의 이점으로 손꼽히던 여러 경제 요소가 위기 전파의 요인이 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유로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로지역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처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유로지역 각국 정부는 경제통합을 심화하고 노동 부문의 유연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시장 주도의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보고서는 현 수준의 경제통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분석하면서, 리스본 조약 이후 새로운 EU 프로그램인 ‘EU 2020’에 더욱 강력한 경제통합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각국이 외부 국가의 위기가 자국의 위기로 연결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 이러한 경제통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해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¹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2005. 5. 13.). European Court for Human Rights. <http://www.fidh.org/European-Court-of-Human-Rights-interim-measures> (2010. 9. 30.)

¹²Pay me £4bn a year and I’ll stop Europe from turning black: Col Gaddafi demands EU cash to stop immigration via Libya. (2010. 8. 30.). Mail Online. <http://www.dailymail.co.uk/news/worldnews/article-1307704/Colonel-Gaddafi-demands-4bn-EU-prevent-immigration-Libya.html#ixzz11Lv42wRh>http://www.dailymail.co.uk/news/worldnews/article-1307704/Colonel-Gaddafi-demands-4bn-EU-prevent-immigration-Libya.html> (2010. 9. 30.)

¹³European Commission (2000. 11. 22.). Communication on a Community immigration Policy (757), p. 3.

¹⁴European Commission (2006. 10. 12.). The demographic future of Europe—from challenge to opportunity (571).

¹⁵European Commission (2001). 2001/C332E/08: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nditions of entry and residence of third-country nationals for the purpose of paid employment and self-employed economic activities.

¹보고서는 이에 대한 자료로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상수지와 재정적자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각국의 정책을 조율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실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포괄적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조율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앞서 설명한 시장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정책 조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야 한다. 또한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자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통화통합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와 조율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위기에 노출된 각국 은행의 체질개선이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 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은행권의 부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은행권의 부실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유럽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했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시장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 국가 부도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조차 제외되는 등 테스트 기준 자체가 느슨했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각국이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은행권을 정상화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유로화 시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다.

넷째, 유럽발 재정위기의 진원지였던 그리스의 국가채무 문제가 다시 유로화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재구조화(restructuring)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스가 스스로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기에는 이 문제가 유로화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따라서 그리스가 EU/IMF의 프로그램대로 속히 재정적자 문제와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은행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통합(fiscal union)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가 없는 경제와 정치통합은 '불안정한 유로화'를 만들 위험이 있다. 리스본조약의 136조에 따

르면 이사회는 이러한 재정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각국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상황이 상이한 여러 국가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 국가의 단기적 손해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과정이 결국 전체적 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처방을 소홀히 한다면, 유로화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유로화에 대한 불신은 결국 유럽지역 경제의 회생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현재 대두된 유로화의 위기가 '지속적인 위기' 혹은 '만성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유로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의 다섯 가지 처방은 결국 남과 북의 유럽, 프랑스와 독일의 유럽, 빈국과 부국의 유럽을 통합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럽은 통화통합과 유로화에 기초한 실질적인 연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자료: Centre For European Reform (2010), How to save the euro.) ★

정민경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제16회 EU 특별강연 The 16th EU Special Lecture

The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16th EU Special Lecture on the 30th of September. Xavier Coget, the head of Economy and Trade section of the EU Delegation, gave a lecture under the title "EU's trade policy." Mr. Coget explained the key components of EU's trade policies during his 2-hour long lecture. Participants showed a special interest in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and raised questions on its economic effect. They also discussed on the issues related to Korea and EU's future economic relationship.

제16회 EU 특별강연이 9월 30일 연세-삼성 학술정보원 6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회에는 주한 EU 통상국 대표인 사비에르 코젯(Xavier COGET, Head of Economy and Trade Section, EU Delegation)대표가 <EU의 통상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연은 한-EU FTA 정식 서명을 앞두고 한국과 EU의 통상에 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실시되어 한국과 EU의 통상 미래에 관해 깊이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EU Brief』 만족도 조사 결과 Satisfaction survey on EU Brief

The EU Centre carried out a survey on our readers'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EU Brief during its first year. The EU Centre sent out a questionnaire with its August Brief(Volume 2: Number 5) and we asked the readers whether the contents of the Brief is timely, useful, and accurate. We appreciate your response and here we present the result of the survey. The average score on the general level of satisfaction was 8.65 out of 10. Most readers were satisfied with the level of accur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Brief, but they found that the level of timeliness could be improved.

78% of respondents answered "yes" to the question "Does the EU Brief provide timely information?". 90% respond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depth of its contents and 45% said that they were "very satisfied." On the question "Does the EU Brief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ver 85% said they were "satisfied". More than 95% of the respondents found that the EU Brief is helpful on improv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European Union.

21% of the readers were unsatisfied with the timeliness of the Brief and suggested that the Brief could contact the readers and find out what their current areas of interests are by using email or twitter. Also, a number of readers wished to receive the EU Brief in the PDF format so they could send it to their peers and they asked to diversify our columnists.

47% of the respondents were from private corporations and 21% were from universities. The former group showed a greater concern regarding the timeliness of the content.

The EU Centre currently posts the EU Brief in the PDF format on its website(www.yonseri.org) and it plans to make improvements that reflect readers' opinions and suggestions. The EU Centre will send a small gift to a number of chosen respondents in October.

『EU Brief』 출간 1주년을 맞아 EU 센터는 지난 8월에 『EU Brief』 제2권 5호를 발행하면서 『EU Brief』독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EU Brief』의 시의성, 정보 정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65점(10점 만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Brief』독자들은 정확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시의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의견을 보내온 독자 중 78%는 "『EU Brief』가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90% 이상이 "『EU Brief』가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을 해주었고, 특히 이 중 40%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또한 『EU Brief』는 정보의 정확도 측면에서도 85% 이상의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으며, 95% 이상이 EU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선택했다. 나머지는 "보통 수준이다"라고 답했다.

반면, 『EU Brief』가 시의성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 독자 중 약 21%가 이 질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메일과 트위터 등을 통해 독자와 더욱 자주 소통하여 주제를 공모하고, PDF 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필자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조사에는 경제계(47%)와 학계(21%)에 종사하는 독자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경제계 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EU Brief』의 시의성 면에서 더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EU 센터는 홈페이지(www.yonseri.org)를 통해 『EU Brief』의 전체 기사를 PDF 파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독자들 중 일부를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10월 중으로 발송할 것이다.